

호남 유권자의 이념 정향과 정당 선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험적 분석*

지병근**

이 연구는 한국에서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호남 유권자의 이념 정향과 정당선호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최근에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정당들의 후보공천과 본선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지난 20대 총선에서와 달리 호남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국정치학회의 선거후 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 연구는 제21대 총선에서 호남 유권자들의 진보적 성향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상대적 선호에는 유권자들의 이념적 보수성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간의 이념적 거리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과 중요도가 커졌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는 호남에서 경쟁적 정당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만이 아니라 호남 유권자들과의 이념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정당정책의 변화 등 야당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지역주의, 호남,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이념, 정당 선호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외부평가」 보고서에 포함된 초고를 발전시킨 것이다.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서론

이 연구는 한국에서 가장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호남 유권자의 이념 정향과 정당선호에 관한 것이다. 호남에서는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소위 ‘민주당계 정당’의 일당우위체제가 유지되어 오다가 2016년 실시된 제20대 총선에 이르러서야 사실상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경쟁력 있는 복수정당 간의 선거경쟁이 이루어졌으며 신생정당인 국민의당이 거의 모든 호남의 지역구 의석을 차지하면서 종결되었다. 따라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호남에서 지역정당을 표방한 민생당이나 안철수가 재창당한 국민의당이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새로운 ‘게임의 룰’이 과연 소위 호남의 ‘지역주의적 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별다른 이변 없이 전국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종결되었으며, 호남의 정당체제는 다시 일당우위체제로 회귀하였다.¹⁾ 호남의 유권자들은 지난 2017년 실시된 제19대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다. 비록 제20대 총선 이후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통한 바른미래당 창당과 당권을 둘러싼 내분으로 분열했던 국민의당의 후계정당들이 민생당으로 통합하여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구도를 모색하였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안철수가 재창당한 국민의당

¹⁾ 나중에 후술하겠지만 호남에서는 민정당의 후신 정당들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판단이 역설적으로 지역정치의 발전에 필요한 경쟁적 정당체제의 등장을 가로막아왔다고 할 수 있다.

(창준위 결성 2020.2.9.) 역시 호남에서 외면을 받으며 지극히 저조한 득표에 그쳤다. 아울러 처음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 제한과 양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무력화됨으로써 군소정당들의 의석수 확보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이 연구는 호남에서 실시된 제21대 총선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반면 민생당과 국민의당은 물론 미래통합당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된 이유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소위 ‘지역주의’로 명명되어온 이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결정 및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주요 정당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들의 이념적 특성이 정당선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호남 유권자들의 정당선호 및 투표행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 경쟁적 정당체제의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집합적 자료와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정당학회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직후 실시한 유권자 정치의식조사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호남의 선거정치에 관한 선행연구를 소개할 것이다. 3장에서는 이번 총선의 배경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호남에서 진행된 정당들의 후보공천을 포함한 선거과정과 총선 결과를 분석하고, 4장에서는 제20대 총선과 비교를 통해 호남 유권자들의 투표선택과 정당에 대한 태도(정당 선호도, 친근감, 거부감, 지역대표정당 인식)와 함께 이들의 이념적 정향과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과의 이념적 거리 차이가 각 정당들에 대한 선호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그 함의를 논하였으며, 더 나아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비례성 강화 및 비례대표 후보선출과정의 개선, 지

역주의 종식을 위한 미래통합당의 체질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 호남의 선거정치에 관한 선행 연구

호남의 선거정치는 한국정치 분야의 정치학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의 선거정치를 소위 ‘지역주의’로 명명할 만큼 유권자들이 거주지나 출신지에 따라 투표선택을 해왔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3김 시대’가 종결된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의 유권자들은 정치적 성향이 매우 동질적일 뿐만 아니라, 역대 선거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당계 정당’에 대한 지지를 일관되게 유지해왔기에 그 기원과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황태연 1997; 조기숙 1997; 박상훈 2001; 김욱 2004a, 2004b; 최준영·조진만 2005; 하세현 2005; 김영태 2009; 김태완 2012; 김성모·이현우 2015; 지병근 2015; 김용철·조영호 2017; 문우진 2017; 이재목·김기동 2017; 윤광일 2017; 노기우·정민석·이현우 2018; 강원택 2019).²⁾ 최근에는 이념갈등, 세대 갈등, 계급 갈등과 같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지역주의적 투표결정의 강도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둔 횡단 및 종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최준영·조진만 2005; 김진하 2010; 지병근 2014; 지병근 2016; 문우진

2) 제20대 총선 이후 지역주의와 관련한 연구들이 급증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지역주의의 기원 및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련 변수들의 측정수단을 제시한 김용철·조영호(2017)와 후보자의 지역대표성(출생지와 졸업학교)과 득표율 및 당선가능성을 분석한 정수현(2017), 지역감정의 변화를 추적한 윤광일(2017), 거주지와 출생지를 구분하여 이념적 특성과 지역주의를 분석한 문우진(2017), SNS 사용과 지역주의적 투표 간의 관계를 분석한 이재목·김기동(2017)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다.

2017; 정재도·이재목 2018).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거주지나 출생지에 연고를 둔 정당에 대한 투표를 의미하는 소위 ‘지역주의적 투표행위’의 기원을 오래된 편견에서 비롯된 특정지역에 대한 반감(지역감정)이나 이를 활용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창출하려는 지역정당의 정치적 동원전략, 그리고 실재하는 지역차별에 대한 저항의식이나 지역이익을 실현하려는 유권자들의 욕구에서 찾았다.³⁾ 대표적으로 황태연(1997)은 김영삼 정부 말기 소위 PK출신 인사들이 지배하는 “지역(경남)패권의 정치”와 “경상도재벌자본주의”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치문제이며, “경남정권의 지역패권 추구와 차별지역들의 거센 저항 간의 충돌”이 유권자들의 “투표방향을 결정하는 1차적 변수”가 되었다고 보고 호남의 지역주의가 “저항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p. 12).⁴⁾

그런데 흥미롭게도 지금까지 지역주의적 투표행위의 기원을 지역 유권자들의 이념적 특성에서 찾으려는 체계적인 시도는 거의 없었다. 물론 적지 않은 연구들이 영호남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비교를 통해 호남의 유권자들이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반면 영남의 유권자들은 보수적이라는 점과 함께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미래통합당이나 그 전신이었던 정당들보다 더불어민주당(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험적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최준영·조진만 2005; 지병근 2014; 문우진 2017). 하지만, 이를 지역주의적 투표와 관련지어 체

³⁾ 호남의 지역주의 투표는 5.18민주화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전두환 집권 시기 여당이었던 민정당의 후계정당을 견제하기 위해 선거공간을 활용한 일종의 ‘정치적 저항행위’로, 이를 단순히 타지역에 대한 호남인의 편견이나 지역의 배타적 이익을 실현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황태연 1997; 지병근 2015).

⁴⁾ 더 나아가 그는 “지역주의를 무차별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며, 헤치터의 ‘내부식민주론’에 기초하여 패권적 지역주의에 대항하여 ‘저항적 지역연합’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지역주의를 제외한 주요 사회적 의제들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정책정당에 대한 논의를 “씨알도 먹히지 않을” 방책으로 폄하하였으며 오히려 지역주의적 투표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계적으로 분석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조성대 2008; 문우진 2017).⁵⁾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유권자들의 이념적 성향에 기초한 투표, 즉 ‘이념 투표’를 지역주의적 투표행위와 오히려 상충하거나 이를 ‘대체(displacement)’하는 것으로 여겨왔다(최준영·조진만 2005; 조성대 2008; 김영태 2009). 물론 이러한 경향은 유권자들의 지역주의적 투표결정이 편견이나 정치적 조작에 의한 것이며 “사고의 체계(a system of ideas)”를 의미하는 이념과는 관련이 없다는 인식이 학계에서도 강하게 작동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특정 지역의 ‘지역주의적 투표’의 요인을 통상적으로 그 지역의 가변수를 이용하여 ‘거주 혹은 출신 여부’로 환원시켜온 경험적 연구방법 또한 이러한 경향을 가중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은 이들의 다양한 특성에서 기인하며 ‘지역주의적 투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역 유권자들의 이념적 특성 또한 이러한 특성들 가운데 하나이다.⁶⁾

호남에서의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는 정당 간 “이념 경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민주당계 정당’들은 지속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어지는 영남기반 지역정당과의 이념적 대결을 벌였다. 한국의 정당들은 역풍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

⁵⁾ 조성대(2008, 191)는 히닉(Hinich 2005)의 공간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재벌규제나 사형제와 달리 대북지원과 한미관계 이슈가 “지역주의 균열구조와 동일한 정치적 갈등구조”를 지니며 “지역정당체계의 대표적인 이념적 균열”로 작용해왔다고 주장하였다. 문우진(2017, 84, 107)은 제15대 대선(1997)부터 제20대 총선(2016) 시기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의 지역주의가 이념적 요소와 중첩되어 있으며, 특히 호남출신의 경우 “지역적 요소와 정책선호가 상당히 중첩된 결과”이며 “순수한 지역주의의 효과는 훨씬 작다”라고 주장하였다.

⁶⁾ 그동안 대부분의 선거연구자들은 공통의 ‘거주지’ 혹은 ‘출생지’를 갖는 유권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투표의 패턴을 ‘지역주의적 투표’로 규정하고, 그 존재와 강도를 거주지 및 출생지 변수가 포함된 모델을 이용하여 경험적 분석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단지 거주지 혹은 출신지 효과만을 분석한 것이며, 지역 유권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지역균열과 이념균열의 교차 혹은 중첩에 관한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향후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기보다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과 ‘가치’를 제시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⁷⁾ 유권자들 역시 김옥(2007, 118)이 주장한 것처럼 “감성적, 정서적 유대감” 대신에 “이념적 정책적 요소”에 의존한 투표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호남 유권자들의 경우 민주당계 정당이 제시해온 정책과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를 반영한 투표결정을 한다는 것이다(지병근 2013).⁸⁾

일부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듯이 호남은 이념적으로 진보적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⁹⁾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도 호남의 유권자들에게는 민정당의 후신이자 공안검사 출신이 당대표를 맡으며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던 미래통합당을 선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친족 혹은 이웃을 살해한 반인륜적이며 부도덕한 정권을 옹호하거나 부역했던 이들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여기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이들의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호남 유권자와 정당의 이념적 거리가 미래통합당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의 고향이나 거주지가 아니라 이들과의 이념적·정책적 근접성을 고려하여 지지할 대상을 결정하며, 정당들은 지역감정을 조작하여 지역 유권자가 아니라 이념적·정책적 차원에서 자신들과 근접한 유권자들을 동원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7) 예를 들어,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의 일각에서는 “정권교체”를 위한 지지를 창출하기 위해 “민주적 가치”를 복원하자며 “남부민주벨트”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는 “패권적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부산/경남과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전통적 민주연대를 복원”하여 정권교체를 도모하자는 주장이었다(장덕중 2011).

8) 전자의 경우는 자유와 인권, 후자의 경우는 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핵심 이슈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개혁’과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이들이 제시한 ‘가치’들은 장기간의 경쟁 속에서 지지자들에게 ‘내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9) 호남 유권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진보적 성향은 인권과 민주화, 그리고 남북관계를 포함한 정치적 이슈에 제한되어 있다(지병근 2014; 김희민 2017).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정당들의 이념적 양극화 현상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3. 제21대 총선에서 호남지역의 선거과정 및 결과

1) 제21대 총선의 배경

제21대 총선은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2017.5.11.~) 3년차에 시행되었으며, 이는 정권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징계’와 ‘보상’의 정치적 계기가 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보수성향의 야당들은 이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한국에서 실업문제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으며,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집값 상승은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 화해무드는 북미 하노이회담(2019.2.27.~2.28)이 성과 없이 종결되면서 급속히 냉각되었으며, 2020년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었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의석수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처럼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임박하면서 점차 정국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전환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국보다 훨씬 심각한 사상이자 발생하자 외신들이 한국 정부의 대응책을 호평하기 시작하였으며, 대구 집회에 참석했던 신천지 신도들로 인해 코로나 확

진자가 확대되자 이들은 물론 교주 ‘이만희’가 공분의 대상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비난의 화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일부 소속의원들을 파견하여 창당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창당함으로써 선거법 개정을 지지해온 유권자들의 지탄을 피하면서 본선에서는 실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새로운보수당’과 ‘미래를 향한 전진 40’ 등이 합당한 미래통합당(정당합당등록 2020.2.18.; 창준위 결성신고 2020.2.21.)의 황교안 대표는 지역구 공천과정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김형오, 비례대표 후보공천과정에서는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당대표 및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과와 갈등을 빚으면서 잡음이 불거져 나왔다. 더구나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차명진과 김대호의 망언이 이어지면서 미래통합당은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선거 막바지에 과거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종인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선거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16년 전인 2004년 제17대 총선(4.15.)에 도입된 1인 2표제에 의한 비례대표제에 버금가는 정치적 변화가 기대되었다. 비록 당초 개정안 초안에 포함되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의 특성은 빠졌으나 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의석 배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다수제로 인해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던 정의당을 비롯한 일부 군소정당들은 의석 확보에 상당한 도움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이는 양당체제를 기본으로 작동해온 한국의 정당체제가 실질적인 다당제로 전환하여 합의제적 정당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희망 섞인 예측을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현행 47석

의 비례대표의원의 증원 포기과 이미 앞서 언급하였던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이러한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거의 1년여간 국회가 선거법 개혁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을 겪으며 도입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낙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였다. 이는 호남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미 호남 유권자들은 2016년 12월 3일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 발의 시점을 전후로 더불어민주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이어졌다.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반전을 노리던 안철수가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던 소속의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바른정당과 통합하여 바른미래당을 창당하며 지지 세력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오히려 호남 유권자들의 반발을 사며 정치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였다. 민주화 이후 호남의 선거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민주당계 정당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정당'으로 2016년 제20대 총선을 통해 부상했던 국민의당 실험이 실패하고 만 것이다. 결국 미래통합당을 대적하여 집권할 수 있는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유권자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정당들의 후보공천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하면, 민주화 이후 실시된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계 정당이 호남에서 압승을 해왔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호남에서 선거경쟁은 본선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예년에

비해 유권자들로부터 훨씬 더 높은 지지를 얻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공천을 받기 위해 예비후보자들이 더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2월 5일 경선 및 단수공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그 후 광주광역시에서는 18명(8개 선거구), 전남에서는 36명(10개 선거구), 전북에서는 20명(10개 선거구)의 예비후보들이 경쟁을 벌였다. 호남의 28개 선거구 가운데 단수공천이 이루어진 곳은 광주광역시의 경우 현역의원인 송갑석의 지역구인 서구갑, 전북 정읍·고창(윤준병)과 김제·부안(이원택) 등 3곳이었으며, 이후 영입인사인 소병철을 전략공천한 전남 순천갑 1곳이 추가되었다.¹⁰⁾ 반면, 다른 정당들은 후보자를 찾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미래통합당은 광주에서 2곳, 전남에서 6곳, 전북에서 4곳에 후보를 공천하는데 그쳤다. 호남에 전력을 기울인 민생당은 광주에서 7곳, 전남과 전북에서 각각 6곳, 정의당은 광주에서 6곳, 전남과 전북에서 각각 4곳에 후보를 공천하였다. 민중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3곳, 그리고 전북에서 1곳에 후보를 공천하였다. 국민의당은 아예 지역구 선거를 포기하고 비례대표선거에만 후보를 공천하였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공천기준으로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위해 여론조사(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경선(안심번호 여론조사) 투표 50%를 합산)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예비후보자들은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들은 물론 일반시민들로부터 지

¹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처럼 호남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을 남발하지 않은 것은 과거 이 지역에서 이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컸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도 전관예우를 거부하며 대형로펌 영입제안을 거절하여 관심을 모았던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소병철을 영입하여 호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순천시갑 선거구에 전략공천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반발이 일어났다.

지를 얻기 위한 선거운동에 초점을 두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권리당원은 물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여론조사 응답자를 확보하기 위한 편법을 사용하면서 각종 잡음이 불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 광산읍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전과와 권리당원 불법 조회 및 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되어 재심요청이 받아들여져 재경선을 실시하여 후보자가 당초 박시중에서 민형배로 바뀌는 일까지 벌어졌다. 광산갑의 경우에도 함평군수출신으로 전남도지사 선거에도 출마했던 이석형이 금품살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공천이 무효화가 되고 이용빈으로 후보가 교체되었다. 광주광역시 일부 지역구에서는 코로나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신천지와 후보들을 연계시켜 유권자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려는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하였으며, 이를 주도한 이들이 검찰수사를 받는 등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¹¹⁾

민생당의 경우는 후보 공천과정에서 경쟁이 민주당에 비해서는 치열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생당이 동구청장을 역임했던 김성환을 광주광역시 동남을 선거구에 전략공천하였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여 본래 이 지역구 의원이며 국회부의장까지 역임했던 박주선을 전략공천하자 김성환이 반발하여 민생당을 탈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유력한 후보가 없던 정의당이나 민중당의 경우 별다른 잡음 없이 후보 공천이 이루어졌다. 민생당의 경우에는 전국 58명의 지역구 후보자들 가운데 호남에서 19명(32.8%)을 공천하였다. 이는 민중당이 전국 59명 가운데 7명

¹¹⁾ 대표적으로 남구청장 재직시절 신천지봉사단이 감사패를 받은 것을 빌미로 광주광역시 동남갑에 출마한 가톨릭 신자 최영호에 대하여 다른 후보 측에서 대포폰을 이용해 “선거 때 신천지의 권리당원 도움 받는 신천지의 아들 최영호는 물러나라”는 문자가 발송되어 광주광역시 선관위의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장덕중 2020; 강경남 2020).

(11.9%), 정의당이 전국 75명 가운데 14명(18.7%)의 후보를 호남에서 공천한 것을 고려하면 민생당의 호남지역당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²⁾

3) 호남의 선거결과

(1) 지역구 선거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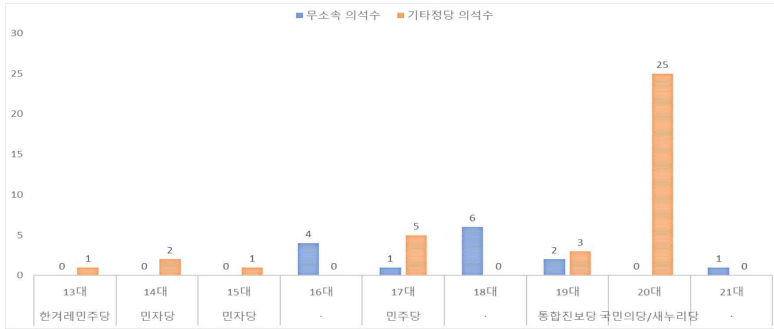
호남에서 제21대 총선은 총 28석 가운데 2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종결되었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서 이용호 무소속 후보가 유일하게 당선된 것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더구나 이용호 역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복당 의사를 강하게 밝혀왔던 인물이었다(최영권 2019; 박동해 2020; 신광영 2020).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 가운데 제16대 총선과 제18대 총선에 이어 세 번째로 다른 정당과 의석을 분점하지 않고 호남의 지역구 의석을 독식하게 되었다.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 경쟁한 제17대 총선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의당에게 완패한 제20대 총선은 차치하고 민주화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계 정당이 호남에서 다른 정당에게 한 석도 빼앗기지 않고 무소속에게만 1석을 내어 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아래의 <그림 1>에 잘 나타나 있듯이 비민주당계 정당들과 무소속 후보가

12) 광주지역에서는 2020 총선시민모임이 결성되어 후보자들의 정책평가를 바탕으로 '좋은 후보'를 선정하는 활동을 하였다(김정대 2020). 이들은 예비후보 36명과 현역 의원 8명 가운데 정책질의서에 답변한 36명을 평가하여 12명을 좋은 후보로 선정하였다(2020 총선시민모임 2020.03.03.). 여기에는 정의당 2명(나경채, 이승남), 민주당 2명(윤민호, 정희성), 민주당 9명(민형배, 박시중, 양향자, 윤영덕, 이남재, 이용빈, 이형석, 전진숙, 조오섭) 등이 포함되었다. 전남의 경우에는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정치개혁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다(형민우 2020).

차지한 의석수는 제13대 총선에서 한겨레민주당이 1석(전남), 제14대 총선에서 민자당 2석(전북), 제15대 총선에서 민자당 1석(전북), 제16대 총선에서 무소속 3석(광주와 전북 각1석, 전남 2석),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당 5석과 무소속 1석, 제18대 총선에서 무소속 6석(광주 1석, 전남 3석, 전북 2석), 제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3석(광주, 전남, 전북 각 1석)과 무소속 2석(광주와 전북 각 1석),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2석(전남과 전북에서 각 1석) 국민의당 23석(광주와 전남 8석, 전북 7석)이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그림 1〉 호남에서 비민주당계 및 무소속 의석수(제13대 총선~제21대 총선)



각 선거 차수 아래의 정당 명칭은 지역구 의석을 차지한 비민주당계 정당의 명칭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후 호남은 역대선거에서와 달리 민주당계 단일정당에 대한 ‘지역주의적 투표’에 대한 주목을 덜 받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지표 때문이다. 첫째,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지역이 많았다. 대전광역시와 세종시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을 모두 독식하였으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80%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차

지할 수 있었다(부록 1-1 참조). 전국의 17개 광역자치시도(세종시 포함) 가운데 영남의 5곳과 강원도를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경쟁정당인 미래통합당보다 적은 지역구 의석을 차지한 곳은 없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의존도는 높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의 지역구 선거에서 차지한 당선자 의석 총수(163석) 가운데 호남에서 당선자 의석수(27석)가 차지하는 비율은 16.5%(광주광역시 4.9%, 전남 6.1%, 전북 5.5%)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과는 대조적으로 제21대 총선에서 다른 정당들이 거둔 성적은 매우 저조하였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호남에서 47.4%의 지지를 얻어 호남 28개 지역구 의석 가운데 무려 23석(82.1%)을 차지한 국민의당의 경우 지역구에 후보를 아예 공천하지 않았다(부록 1-2 참조). 국민의당의 후계정당 혹은 ‘잔여정당(remnant party)’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당은 현직의원들이 출마한 일부 지역구에서 상당한 득표율을 얻을 수 있었지만 당선자를 배출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¹³⁾ 정의당의 경우에도 전남 목포시에서 윤소하가 11.9%를 얻은 것을 제외하면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것은 물론 득표율도 매우 저조하였다. 민중당의 경우 전농 정책위원장과 전남도의원 출신 안주용만이 나주화순에 출마하여 19.5%의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얻으며 2위를 차지하였지만,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나섰던 윤민호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현직 국회의원 김선동이 각각 3.3%와 4.4%의 득표율에 머물렀다.

(2) 비례대표 선거 결과

호남의 비례대표 선거결과 또한 지역구 선거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래의 <표 1>은 각 정당의 지역별 득표수를 전국 득표수로 나

¹³⁾ 민생당 후보로는 박지원(37.3%)과 황주홍(34.3%), 무소속 후보로는 순천시갑 노관규(31.7%) 등이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얻으며 선전하였다.

누어 산출한 지역별 득표율이다. 이 표에 잘 나타나 있듯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선거에서 각각 59.0%와 8.0%를 득표하였다. 지난 제20대 총선의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호남에서 47.9%(광주광역시 53.3%, 전남 47.7%, 전북 42.8%)를 얻었던 국민의당은 이번에는 불과 4.2%(광주광역시 4.9%, 전남 3.9%, 전북 4.1%)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이는 민생당이 얻은 6.7%보다 더 낮은 것이었으며, 미래한국당이 얻은 4.5%보다도 낮은 것이었다. 한편, 호남의 비례대표선거에서 정의당은 10.5%, 민중당은 2.5%를 얻었다.

〈표 1〉 정당 득표의 지역 의존도(제21대 총선-비례대표, 각 정당의 지역별 득표율)

시도명	미래 한국당	우리 공화당	친박 신당	한국 경제당	더불어 시민당	열린 민주당	민생당	국민 의당	정의당	민중당
수도권	47.5%	42.0%	43.6%	37.6%	51.2%	53.8%	44.2%	56.0%	53.4%	37.9%
호남	1.3%	5.4%	3.2%	9.3%	17.7%	14.8%	24.8%	6.2%	10.9%	23.6%
대구 경북	16.4%	20.7%	17.7%	17.8%	4.8%	5.4%	5.7%	10.3%	6.6%	6.5%
부산 울산 경남	20.1%	16.5%	16.5%	17.0%	12.7%	12.6%	12.3%	13.5%	14.0%	17.7%
충청	10.2%	10.6%	12.9%	11.9%	9.7%	9.4%	9.5%	10.3%	10.5%	10.1%
기타	4.4%	4.8%	6.2%	6.3%	3.9%	3.9%	3.6%	3.6%	4.6%	4.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호남	4.5%	0.4%	0.2%	0.2%	59.0%	8.0%	6.7%	4.2%	10.5%	2.5%
전국	33.8%	0.7%	0.5%	0.2%	33.4%	5.4%	2.7%	6.8%	9.7%	1.1%

이탈릭체는 정당별 득표율(호남 혹은 전국)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얻은 득표수 가운데 호남에서 얻은 득표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7.7%와 14.8%에 그쳤다는 사실이다.

이 비율은 이들이 부산·울산·경남에서 얻은 득표수가 차지하는 비율인 12.7%와 12.6%와 비교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며, 수도권에서 얻은 득표율인 51.2%와 53.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구 선거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선거에서도 호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의 의존도는 높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 별로 호남에 대한 의존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17.7%)과 열린민주당(14.8%)보다 민생당(24.8%)과 민중당(23.6%)이 더 높았으며, 그 뒤를 정의당(10.9%), 한국경제당(9.3%), 우리공화당(5.4%), 친박신당(3.2%), 미래한국당(1.3%)이 따랐다.

4. 호남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태도의 지속과 변화

1)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선호도와 친근감, 미래통합당에 대한 거부감

아래의 <표 2-1>은 한국정치학회의 제21대 총선후 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에게 투표한 이들이 제21대 총선에서는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잘 드러나듯이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에게 투표한 이들의 ‘변절(defection)’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제20대 총선의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했던 이들 가운데 대부분(96.4%)이 제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반면, 국민의당 후보에게 투표했던 이들 가운데 대부분(82.1%)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였으며, 제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의 주축이었던 이들이 중심이 되어 창당한 민생당 후보

에게 투표한 이들은 7.1%에 불과하였다.

〈표 2-1〉 제20대 및 제21대 총선에서의 투표 대상의 변화 비교(지역구, 비례대표)

제20대 총선		제21대 총선					
지역구 선거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사레수
호남	새누리당	0.0	0.0	0.0	0.0	0.0	0
	더불어민주당	96.4	0.0	3.6	0.0	0.0	55
	국민의당	82.1	0.0	7.1	7.1	0.0	28
	정의당	0.0	0.0	0.0	100.0	0.0	1
	전체	89.6	0.0	5.2	3.1	0.0	96
전국	새누리당	11.4	86.9	0.0	0.7	0.0	306
	더불어민주당	93.1	5.2	1.1	0.0	0.0	364
	국민의당	67.5	12.5	7.5	10.0	0.0	40
	정의당	30.8	15.4	0.0	46.2	0.0	13
	전체	54.9	40.4	1.2	2.0	0.0	842
비례대표 선거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미래 한국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전체
호남	새누리당	0.0	0.0	0.0	0.0	0.0	0
	더불어민주당	87.3	0.0	3.6	5.5	1.8	55
	국민의당	76.9	0.0	0.0	23.1	0.0	26
	정의당	33.3	0.0	0.0	66.7	0.0	3
	전체	75.5	0.0	2.9	12.8	1.0	102
전국	새누리당	9.8	76.5	0.0	2.1	0.6	336
	더불어민주당	78.4	4.6	3.8	4.6	1.4	371
	국민의당	59.1	11.4	2.3	20.5	4.6	44
	정의당	29.2	12.5	4.2	33.3	0.0	24
	전체	39.1	31.5	2.1	5.0	1.5	1044

자료 출처: 한국정치학회 선거후 여론조사(2020년)

비례대표선거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응답자들 가운데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투표했던 이들 가운데 대부분(87.3%)이 제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혹은 열린민주당에게 투표한 반면, 국민의당에게 투표했던 이들 가운데 대부분(76.9%)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들에게 투표하였으며 안철수가 재창당한 국민의당에게 투표한 이들은 한 명도 없었다.

아래의 <표 2-2>는 2016년 제20대 총선과 2020년 제21대 총선 직후 실시된 한국정치학회 선거후 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호남 유권자들의 정당 선호도, 친근감을 느끼는 정당, “절대 투표하지 않을 정당” 등의 분포를 보여준다. 이 표에 잘 나타나 있듯이 호남은 다른 지역과 달리 미래통합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도는 현격히 낮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았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호남 응답자들의 태도의 차이는 제20대 총선 시기에 비해서 제21대 총선 시기에 더 커진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표 2-2> 호남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태도

		호남		영남		전국	
		2016	2020	2016	2020	2016	2020
선호도**	더불어민주당	56.03	7.68	46.75	4.69	49.68	5.51
	미래통합당*	37.21	2.32	50.66	5.46	45.89	4.73
	국민의당	56.42	5.03	42.12	4.22	44.45	4.51
	정의당	41.42	6.09	30.26	4.36	30.97	4.73
	민생당	-	4.77	-	3.37	-	4.27
친근감(%)	더불어민주당	26.16	85.37	14.98	25.38	17.73	52.14
	미래통합당*	3.83	0.00	39.07	70.77	24.66	42.16
	국민의당	26.43	0.00	6.54	0.77	8.89	0.79
	정의당	1.91	6.10	0.69	1.54	1.26	2.69
	민생당	-	8.54	-	0.00	-	1.74
“절대 투표하지 않을 정당” (%)	더불어민주당	-	0.00	-	8.49	-	11.69
	미래통합당*	-	42.16	-	4.63	-	18.01
	국민의당	-	1.96	-	1.16	-	3.07
	정의당	-	0.00	-	0.77	-	4.79
	민생당	-	7.84	-	5.02	-	5.65

* 2016년은 새누리당, ** 2016년은 101점 척도(0~100), 2020년은 11점 척도(0~10)

자료 출처: 한국정치학회 선거후 여론조사(2016년, 2020년)

제21대 총선후 여론조사결과만 보더라도 11점 척도(0~10)로 측정한 호남 응답자들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선호도(2.32)보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선호도(7.68)는 무려 5.3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의 경우 미래통합당에 대한 선호도는 4.73,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선호도는 5.51). 이는 제20대 총선후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양당에 대한 선호도 격차는 2020년에 비해서 크지 않았다. 101점 척도로 측정한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도(37.21)보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남 응답자들의 선호도(56.03)가 18.8 더 높았다(전국의 경우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도는 45.89,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선호도는 49.68).

친근감의 경우에도 호남은 다른 지역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제21대 총선후 여론조사에서 호남 응답자들 가운데 미래통합당에게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이는 단 한명도 없었지만 더불어민주당에게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이는 무려 85.37%에 달하였다(전국의 경우 미래통합당에게 친근감을 느낀 응답자는 42.16%, 더불어민주당에게 친근감을 느낀 응답자는 52.14%).¹⁴⁾ 제20대 총선후 여론조사에서도 양당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이들의 비율에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만 2020년에 비해서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새누리당에게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이는 3.83%에 불과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에게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이도 26.16%에 그쳤다(전국의 경우 새누리당에게 친근감을 느낀 응답자는 24.66%, 더불어민주당에게 친근감을 느낀 응답자는 17.73%).

아울러 호남의 유권자들은 영남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친근감을 느끼는 이들의 비율이 높은 미래통합당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 응답자 가운데

¹⁴⁾ 영남의 경우에는 호남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선호도(4.69)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선호도(5.46)보다 조금(0.77) 낮았다. 이들 가운데 친밀하게 느끼는 정당으로 미래통합당을 꼽은 이는 무려 70.8%에 달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을 꼽은 이들도 25.38%였다.

무려 42.2%의 응답자가 미래통합당을 “절대 투표하지 않을 정당”이라고 꼽았다. 영남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을 “절대 투표하지 않을 정당”으로 꼽은 응답자는 각각 8.5%와 5.0%에 그쳤다. 이 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호남 응답자들의 경우 미래통합당이라고 응답한 이는 한명도 없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응답한 이는 무려 97.1%였다(전국의 경우 미래통합당이라고 응답한 이는 33.2%,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응답한 이는 42.5%).

2)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인식

이처럼 호남 유권자들이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선호도와 친근감을 갖는 반면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의 선호도와 친근감을 느끼며, 더 나아가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된 것은 그동안 많은 이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오래된 편견, 실재하는 지역차별, 혹은 이를 과장하거나 조작한 정당의 선거 전략 때문일 수 있다.

아울러 이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호남인들의 “가치 체계” 또한 이러한 경향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호남인들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반감은 ‘5.18민주화운동’을 균을 동원해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했던 전두환 정권 시기 집권당이었던 민정당에 기원을 둔 미래통합당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거부감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는 등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보여준 정치적 행태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¹⁵⁾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호남인들의 태도는 이들이 느끼는 미

¹⁵⁾ 이번 조사에서도 지역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국의 응답자들 가운데 25.7%였으며, 호남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10%p 가까이 높은 3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래통합당의 정강정책 및 이념적 지향과의 거리감 때문에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¹⁶⁾

아래의 <표 3>에 잘 나타나 있듯이 2020년 호남 유권자들은 이념 평균이 3.4로 매우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보다 1.68 작은 것이었다(11점 척도, 0~10). 아울러, 호남인들이 가장 이념적으로 거리감을 느끼는 정당은 미래통합당으로 그 거리는 상당히 멀었으며 그 다음이 국민의당, 민생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의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이념적 거리는 호남의 경우 1.11로 전국평균인 2.34보다 훨씬 가까웠던 반면, 미래통합당과의 이념적 거리는 무려 5.34로 전국평균인 2.91보다 두 배 가까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호남 유권자들의 이념성향과 변화

이념성향	호남				전국				차이	
	사례수	2016 (A)	2020 (B)	차이 (A-B)	사례수	2016 (a)	2020 (b)	차이 (a-b)	A-a	B-b
응답자	103	4.27	3.40	0.87	1122	5.23	5.08	0.15	-0.96	-1.68
더불어민주당	102	4.43	3.21	1.22	1120	3.80	3.01	0.79	0.63	0.20
미래통합당	96	7.38	7.40	-0.02	1118	7.80	7.56	0.24	-0.42	-0.16
정의당	77	3.65	3.75	-0.10	1045	3.26	3.56	-0.30	0.39	0.19
국민의당	97	4.02	4.98	-0.96	1090	4.22	4.94	-0.72	-0.20	0.04
응답자-민주당	95	1.62	1.11	0.51	1089	2.37	2.34	0.03	-0.75	-1.23
응답자-미래통합당	89	3.81	5.34	-1.53	1085	2.93	2.91	0.02	0.88	2.43
응답자-정의당	71	1.87	1.53	0.34	1017	2.71	2.39	0.32	-0.84	-0.86
응답자-국민의당	90	1.36	2.59	-1.23	1059	2.04	2.04	0.00	-0.68	0.55

자료 출처: 한국정치학회 선거후 여론조사(2016년, 2020년)

¹⁶⁾ 응답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경우 가장 많이 고려한 우선 순위 두 가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출신 지역”을 선택한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를 1순위로 지목한 이는 13명(1.25%), 2순위로 지목한 이는 37명(3.54%)으로 이들을 모두 합하더라도 50명(4.9%)에 불과하였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호남 유권자들의 이념적 특성을 2016년 제20대 총선시기와 비교해보면 몇 가지가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에서는 호남 유권자들이 2016년에 비해서 이념적으로 진보적 성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의 경우에는 4.43이었던 응답자들의 이념평균이 3.40으로, 전국의 경우에는 5.23에서 5.08로 변화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념평균 또한 호남에서 4.43에서 3.21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전국의 경우에는 3.80에서 3.01로 감소하였다. 이와 달리 미래통합당의 이념평균은 전국에서 감소하였지만 호남에서는 증가하였다. 이는 4년 전에 비해서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진보적인 정당으로 미래통합당은 더 보수적인 정당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념적 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2006년에 비해서 2020년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이념적 거리는 1.62에서 1.11로 감소한 반면, 미래통합당과의 이념적 거리는 3.81에서 5.34로 급증하였다. 전국의 경우에는 응답자들과 민주당 간의 이념적 거리는 2.37에서 2.34로, 미래통합당 간의 이념적 거리는 2.93에서 2.91로 약간 감소하였다.¹⁷⁾

3) 이념적 성향과 정당 선호도

이 연구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의 결정요인을 최소자승모형(OL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본모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대한 선호도 차이(더불어민주당 선호-미래통합당)가 종속변수이며, 독립변수로는 호남(거주=1, 비거주=0)과 영남(거주=1, 비거주=0) 등 지역 더미변수들과 이념적 보수성(0~10: 0=진보, 10=

¹⁷⁾ 국민의당은 이념평균이 호남의 경우 2016년 4.02에서 2020년 4.98로, 전국의 경우 4.22에서 4.94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응답자들이 이 정당을 과거에 비해 더 보수적인 정당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국민의당과의 이념적 거리는 호남의 경우 1.36에서 2.59로 증가한 반면, 전국의 경우 2.04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과의 이념적 거리 차이(|응답자 이념적 위치-더불어민주당 이념적 위치|-|응답자 이념적 위치-미래통합당 이념적 위치|) 등 두 개의 이념관련 변수들,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변수들이 포함되었다.¹⁸⁾ 통제변수로는 교육수준(1=고졸 이하, 2=전문대 재학/졸업, 3=4년제 대학 재학 이상), 연령대(1~5: 20대 이하=1, 30대=2, 40대=3, 50대=4, 60대 이상=5), 월소득 수준(1~5: 1=3백만 원 미만, 2=4백만 원 미만, 3=5백만 원 미만, 4=7백만 원 미만, 5=7백만 원 이상) 등이 포함되었다.

이 모델에서 두 개의 지역 더미 변수들 가운데 호남은 종속변수인 더불어민주당의 상대적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영남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미래통합당은 영남에서 지지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념적 보수성과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과의 이념적 거리 차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미래통합당의 이념적 위치가 보수적이며, 더불어민주당과의 이념적 거리가 미래통합당과의 이념적 거리보다 멀수록 더불어민주당보다 미래통합당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학력, 연령대, 소득수준 등 통제변수들의 영향은 확실치 않지만 고학력층과 저연령층, 고소득층이 미래통합당보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학력과 소득은 종속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연령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의 <표 4-1>의 모델 1~모델 3은 제20대 총선, 모델 4~모델 6

¹⁸⁾ 2016년과 2020년 한국정치학회의 총선후 조사는 모두 총선 직후인 4월에 실시되었으며 조사기관은 한국리서치였다. 여기서는 제21대 총선과의 비교를 위하여 제20대 총선 후 여론조사의 101점 척도로 측정된 정당선호도를 1/10로 나누어 분석에 이용하였다.

은 제21대 총선을 사례로 분석한 결과이다. 모델 1과 모델 4는 호남거주와 영남거주 등 지역 더미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델 2와 모델 5는 응답자의 이념적 보수성, 응답자와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새누리당과의 이념적 거리 차이 등 이념 관련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델 3과 모델 6은 지역 더미변수, 이념 관련 변수,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변수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표 4-1)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 결정요인(2016년, 2020년)

변수	제20대 총선(2016)			제21대 총선(2020)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호남	1.55*** (0.257)		0.30 (0.895)	4.90*** (0.431)		1.96 (1.025)
영남	-0.77*** (0.176)		-0.71*** (0.161)	-1.27*** (0.298)		-0.26 (0.186)
이념적 보수성		-0.19*** (0.057)	-0.19*** (0.061)		-0.40*** (0.079)	-0.46*** (0.090)
호남*이념적 보수성			0.11 (0.164)			0.22 (0.174)
이념적 거리 차이@		-0.31*** (0.034)	-0.30*** (0.036)		-0.71*** (0.042)	-0.67*** (0.048)
호남*이념적 거리 차이@			0.03 (0.109)			0.33*** (0.119)
교육수준	0.33*** (0.081)	0.16** (0.078)	0.17** (0.077)	0.48** (0.185)	0.06 (0.116)	0.09 (0.114)
연령	-0.62*** (0.060)	-0.31*** (0.061)	-0.32*** (0.060)	-0.48*** (0.110)	0.10 (0.070)	0.11 (0.069)
소득수준	-0.04 (0.061)	-0.05 (0.057)	-0.05 (0.057)	0.13 (0.117)	-0.06 (0.073)	-0.01 (0.073)
상수	1.69*** (0.372)	1.89*** (0.450)	2.03*** (0.468)	0.88 (0.700)	2.25*** (0.593)	2.21*** (0.619)
사례수	1,209	1,075	1,075	1,044	992	992
결정계수	0.181	0.356	0.376	0.192	0.704	0.720

@ 응답자와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과의 이념적 거리 차이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자료 출처: 한국정치학회 선거후 여론조사(2016년, 2020년)

제20대 총선을 분석한 이 표의 모델 1에서 호남과 영남 등 지역 더미변수들과 통제 변수들 가운데 교육수준과 연령이 종속변수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했던 것처럼 호남 거주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가 증가하는 반면, 영남 거주자의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는 증가하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은 종속변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도 예상했던 것처럼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는 감소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및 새누리당과의 이념적 거리 차이가 클수록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수들의 효과는 모델 1과 동일하였다. 지역 더미변수들과 이념관련 변수들을 모두 포함한 모델 3에서는 이념적 보수성과 응답자와 양당 간의 이념적 차이, 그리고 지역 더미변수들 가운데 영남거주가 통계적으로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호남거주 여부와 지역 더미변수들과 이념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변수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제21대 총선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제20대 총선사례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였다. <표 4-1>의 모델 4와 모델 5에서 영남과 호남 등 지역 더미변수들과 이념 관련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쳤다.¹⁹⁾ 다만 모델 5에서 통제변수들 가운데 소득수준은 물

¹⁹⁾ 이 표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양당과의 이념적 거리 변수들(응답자-더불어민주당, |응답자-미래통합당)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론 교육수준과 연령 변수들의 영향력은 확인할 수 없었다. 모델 6에서는 이들만이 아니라 지역 더미변수들도 종속변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 개의 이념관련 변수들 뿐만 아니라 호남거주와 양당과의 이념적 거리 차이 간의 상호작용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남에서 양당과의 이념적 거리 차이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절반 가까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회귀 계수가 0.33).

그 외에 <표 4-1>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 변화를 살펴보면 주목할 만 한 점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호남과 영남 등 지역 더미변수들의 회귀계수 절대 값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 제20대 총선시기에 비해서 이번 총선시기 유권자들의 정당 선호에 호남과 영남 거주 여부가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호남 거주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가 강화된 반면, 영남 거주자의 경우 감소하였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의 상대적 선호도에 대한 이념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설명력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제20대 총선을 분석한 모델(모델 2와 모델 4)보다 제21대 총선을 분석한 모델(모델 5와 모델 6)에서 이 변수들의 회귀계수 절대값 뿐만 아니라 결정계수가 두 배 정도 컸다. 특히 모델 5와 모델 6에서 결정계수는 각각 70.4%와 72.0%로 지역변수만 포함한 모델 4의 19.2%보다 3배 이상 컸다. 이는 2016년에 비해 유권자들의 정당선호를 결정하는 변수가 이념관련 변수들을 중심으로 단순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호남거주 응답자만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위의 <표 4-1>에서 나타난 이념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과 중요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제20대 총선을 분석한 아래의 <표 4-2>의 모델 2와 모델 3에서 응답자와 정당간의 이념적 거리의 차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상대적 선호

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의 이념적 보수성과 통제변수들은 종속변수에 대하여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 결정요인(2016년, 2020년)

변수	제20대 총선(2016)			제21대 총선(2020)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이념적 보수성		-0.11 (0.129)	-0.11 (0.129)		-0.43*** (0.099)	-0.43*** (0.099)
이념적 거리 차이@		-0.26*** (0.086)	-0.26*** (0.086)		-0.30*** (0.068)	-0.30*** (0.068)
교육수준	-0.21 (0.214)	-0.33 (0.234)	-0.33 (0.234)	0.15 (0.382)	-0.77*** (0.284)	-0.77*** (0.284)
연령	-0.11 (0.162)	-0.06 (0.171)	-0.06 (0.171)	0.64*** (0.212)	0.24 (0.157)	0.24 (0.157)
소득수준	-0.02 (0.156)	0.06 (0.162)	0.06 (0.162)	0.29 (0.239)	0.07 (0.172)	0.07 (0.172)
상수	2.79*** (0.932)	2.59** (1.089)	2.59** (1.089)	2.21* (1.301)	5.92*** (1.130)	5.92*** (1.130)
사례수	121	87	87	102	99	99
결정계수	0.010	0.204	0.204	0.114	0.564	0.564

@ 응답자와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과의 이념적 거리 차이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자료 출처: 한국정치학회 선거후 여론조사(2016년, 2020년)

제21대 총선을 분석한 이 표의 모델 5와 모델 6에서는 응답자와 정당간의 이념적 거리의 차이는 물론 응답자의 이념적 보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종속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에서도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응답자와 더불어민주당과의 상대적 이념적 거리 차이가 클수록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선호도는 감소하였다. 이 모델들에서 통제변수들 가운데 교육수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종속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력이 높을수록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선호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실치는 않지만 이러한 경향성은 고학력자들이 저학력자들에 비해서 호남에서 독점적으로 일당우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념관련 변수들을 포함한 모델들의 결정계수가 이들을 포함하지 않은 모델들에 비해서 현격히 높았다.

5. 결 론

1) 분석 결과 및 함의

지금까지 이 연구는 제21대 총선의 선거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호남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은 물론 이념 정향과 정당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이번 총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무소속 1석을 제외한 나머지 27개의 지역구 의석을 모두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으며, 비례대표선거에서도 이 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59.0%와 8.0%를 득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호남에서 일부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였지만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비례대표선거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호남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거둔 득표율은 불과 4.5%에 불과하였다(정의당 10.5%, 민생당 6.7%, 국민의당 4.2%). 다만, 이번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전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에 지역구 전석, 수도권에서는 80%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차지하는 등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도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게 됨으로써 의석수와 득표율에서 호남 의존도가 낮아졌으며, 이

로 인해 호남에서 ‘지역주의적 투표’가 재연되었다는 비난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호남에서의 선거결과는 정당 측면에서 위성정당의 창당과 군소정당의 대응력 부족은 물론 유권자 측면에서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이들의 ‘변절(defection)’,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한 선호도와 친근감, 더불어민주당의 지역대표성 복원과 함께 미래통합당에 대한 오래된 반감에서 기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호남 유권자들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선호도와 친근감의 수준은 매우 높았지만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현격히 낮았다. 호남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한 이들이 무려 97.1%에 달한 반면, “절대 투표하지 않을 정당”으로 미래통합당을 지목한 이들이 무려 42.2%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주목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에는 유권자들의 이념적 성향은 물론 이들이 인식하는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과의 이념적 거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호남에서 정당정치의 변화, 특히 경쟁적 정당체제의 형성 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²⁰⁾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더 선호했던 호남의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한 것은 이 지역에서도 정당에 대한 태도의

²⁰⁾ 호남의 유권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 동질성이 강하며 ‘개혁 친화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는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계 정당이 지배적 정당(dominant party)의 지위를 재생산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전국적으로는 한국의 정당체제가 양당제적 특성이 강한 다당제이지만 호남에서는 일당지배체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유일하게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하는 독특한 상황이 연출되었지만, 당시에도 광주광역시의 8개 지역구 모두 당선자를 배출하는 등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8년 실시된 지방선거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종결되었으며, 이번 총선에서도 유사한 선거결과가 호남에서 나왔다. 그러나 경쟁적 정당체제 없이 정치적 대표자들에게서 민주적 책임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아울러 호남에서도 유권자의 정당선호가 이들의 이념 정향뿐만 아니라 정당들과의 이념적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를 좁히기 위해 정당들이 이념적 지향과 정책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호남의 정당정치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지난 제20대 총선에 비해서 제21대 총선에서 이념관련 변수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에 미친 영향은 물론 중요도(설명력)가 더 커졌다는 점이다. 이는 호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호남에서 응답자와 주요정당들과의 이념적 거리 차이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약하지만(표 4-1), 이곳에서도 이념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더구나 이러한 변화가 호남 거주지 효과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가운데 나타났다는 점은 지역균열과 이념균열이 상충한다는 기존 연구들의 가정에 반하는 것으로 이들 간의 중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험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유권자들의 이념적 성향이 유권자들의 정당선호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그쳐왔다는 점에서 이 분석결과는 한국의 사회적 균열 구조의 특징과 이를 반영한 정당체제의 변화가능성에 관한 향후 연구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 제언

(1) 호남 시민들의 가치를 반영한 정강정책의 도입 노력

호남의 시민들에게 깊이 내면화된 가치를 반영한 정강정책의 도입은 호남의 시민들로부터 정당들이 신뢰와 정치적 지지를 얻는 것은

물론 경쟁적 정당체제와 정책선거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²¹⁾ 호남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대한 선호도가 지극히 낮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정신계승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오히려 이를 모욕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의원들에 대한 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강한 불신과 반감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미래통합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호남의 유권자들로 하여금 민주당계 정당에 대한 지지를 강제하는 요인으로 활용되어 왔다. 최근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강령을 전면 개정하여 “5·18 민주화 운동”을 계승해야 할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한 것은 무엇보다 호남 유권자들의 지역감정을 자극하거나 이를 ‘호명’하여 지지자를 정치적으로 동원하려는 시도를 예방함으로써 정당 간 정책경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국민의힘 강령 2020.9.2. 전면개정).

(2)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에 대한 당규 및 법제 정비

비록 일당지배체제의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시민들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폄훼하기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다른 정당들의 노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정당민주화와 민주적 책임성을 촉구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21) 미래통합당이 5.18민주화운동을 계기로 형성된 호남의 역사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절대 투표하지 않을 정당”이 아니라 “투표할 수 있는 정당”으로 인정받고 더 나아가 “투표할 정당”으로 여겨지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 때까지 호남에서 정책선거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근본적으로 상대를 부정하고 제압하려는 무관용의 정치문화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정당 간의 정책경쟁은 요원하며 그 책임은 정당들에게 있다.

있을 것이다. 제21대 총선 시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예비후보자간의 과열경쟁, 특히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권리당원 확보경쟁 및 당원명부유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의 논란은 여전히 한국정당들의 공천제도가 미완성이며 이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더구나 이번 총선에서는 정당들이 이른바 “호떡 공천”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수차례 공천결과를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당들이 후보공천과정에서 발생했던 쟁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해 관련 당규를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민주적 후보공천방식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비례성 강화를 위한 의석수 확대 및 비례대표 후보자의 ‘민주적’ 공천 제도화

호남에서 나타난 선거결과가 비례성의 원칙이 간과된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호남에서 중소정당 지지자들이 정치적으로 대표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경쟁적 정당체제의 확립을 위해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따라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번 국회에서도 비례성을 제고하는 선거법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지역구 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거법 개혁을 위해 현재의 의석수를 확대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비례대표후보선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 자체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선거법 개혁을 통해 비례대표선거를 민주적 방식으로 공천하도록 법

제화되었지만 실제로 각 정당이 후보선출방식은 물론 후보자들에 관한 기본정보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시민들의 의지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정당에 의해 선출되고 있다. 이는 비례대표 의석보다 지역구 의석을 늘리자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들의 민주적 책임성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 권역별비례대표제가 권역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와 함께 정당의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0년 10월 12일 접수, 11월 6일 심사완료, 11월 7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경남. “최영호 “신천지 허위사실 유포세력 윤영덕 후보 측.” 「광주드림」 . 2020. 3. 19.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503547 (검색일: 2020. 9. 30).
- 강원택. 2019. “정당 지지의 재편성과 지역주의의 변화 : 영남 지역의 2018년 지방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 18(2). 5-27.
- 김성모·이현우. 2015. “출신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지역주의 행태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보』 . 49(5). 243-266.
- 김영태. 2009. “한국의 선거와 출신지역.” 『현대정치연구』 . 2(2). 61-85.
- 김용철·조영호. 2017. “지역주의 정당구도의 지속과 변화: 경쟁적 가설의 경험적 검증을 통한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33(2). 65-99.
- 김육. 2004a. “17대 총선과 충청권 정치지형의 변화: 지역주의의 약화 및 변화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 7(1). 69-87.
- 김육. 2004b. “한국 지역주의의 지역별 특성과 변화 가능성: 대전,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 14(1). 83-105.
- 김정대. “광주 2020총선시민모임, ‘좋은 후보’ 13인 선정.” 「전남일보」 . 2020. 2. 24. <https://jnilbo.com /2020/02/24/2020022416414713395/> (검색일: 2020. 9. 30).
- 김진하. 2010. “한국 지역주의의 변화.” 『현대정치연구』 . 3(2). 89-114.
- 김태완. 2012. “한국 선거에서의 영호남 지역주의 투표성향에 대한 분석.” 『로컬리티 인문학』. 7. 57-104.
- 김희민. 2017. “한국인들은 무엇으로 민주주의를 평가할까? 승자-패자의 논리, 정당의 지역적 기반과 이념 성향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10(2). 99-129.
- 노기우·정민석·이현우 2018. “영·호남 지역주의의 지속과 변화: 지역감정에 대한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8(3). 1-24.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면접 안내(02.07. 수정). 2020. 02. 05. <https://theminjoo.kr/board/view/cnotice/242201?page=5> (검색일: 2020. 9. 30).

- 문우진. 2017. “지역주의 투표의 특성과 변화: 이론적 쟁점과 경험분석.” 『의정연구』. 23(1). 81-111.
- 박동해. “검찰, 이강래 전 도공 사장 배임 혐의 불기소 처분.” 「뉴스원」. 2020. 2. 4. <https://www.news1.kr/articles/?3833000> (검색일: 2020. 9. 30).
- 박상훈. 2001. “한국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하나: 제16대 총선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35(2). 113-134.
- 신광영. “이용호 남원임실순창 재선 성공.. 전북 유일 비민주당.” 「쿠키뉴스」. 2020. 4. 15.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77154> (검색일: 2020. 9. 30).
- 윤광일. 2017. “지역주의의 변화: 1988년, 2003년 및 2016년 조사결과 비교.” 『의정연구』. 23(1). 113-149.
- 이재목·김기동. 2017. “SNS 사용과 지역주의 투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1(2). 47-68.
- 장덕중. “정세균 "남부민주벨트 복원해 정권교체.” 「연합뉴스」. 2011. 5. 19. <https://www.yna.co.kr/view/AKR20110519152500054> (검색일: 2020. 9. 30).
- 장덕중. “"신천지에 엮일라' 광주 정치권 비상... 의혹 제기 등 난타전.” 「연합뉴스」. 2020. 3. 2.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2125400054> (검색일: 2020. 9. 30).
- 정수현. 2017. “후보자의 지역대표성이 득표율과 당선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한국정치연구』. 26(2). 129-158.
- 정재도·이재목. 2018. “영남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변화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6(4). 59-92.
- 조기숙. 1997. “지역주의 논쟁: 비판이론적 시각에 대한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31(2). 203-232.
- 조성대. 2008. “균열구조와 정당체계.” 『현대정치연구』. 1(1). 169-19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지병근. 2013. “호남지역에서 나타난 정당후보득표율의 지역편향: 제18대 대선 사례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12(1). 141-172.
- 지병근. 2014. “호남 유권자들의 이슈에 대한 태도 및 이념적 특성.” 『21세기정

- 치학회보』 . 24(1). 33-56.
- 지병근. 2015. “민주화 이후 지역감정의 변화와 원인.” 『한국정당학회보』 . 14(1). 63-91.
- 지병근. 2016. “한국에서 거주지 이전이 정당선호 및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 52. 51-77.
- 최영권. “톨게이트 사태’ 자초한 이강래 사장, 총선 출마 위해 사퇴.” 「서울신문」 . 2019. 12. 1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1500124> (검색일: 2020. 9. 30).
- 최준영·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 39(3). 375-394.
- 하세현. 2005. “영남 지역주의의 변화.” 『한국정치외교사논총』 . 27(1). 161-191.
- 황태연. 1997. “내부식민지와 저항적 지역주의.” 『한·독사회과학논총』 . 7. 11-36.
- 형민우.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당, 비례연합정당에 동참해야."” 「연합뉴스」 . 2020. 3. 10.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0112700054> (검색일: 2020. 9. 30).
- 2020 총선시민모임. 2020. “보도자료: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예비 후보, 좋은 후보 철회.” 03.03.
-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정당 총선 공약 평가 자료집.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2020. 4. 8.
- 2020 총선시민모임. 홈페이지. <http://cafe.daum.net/change2020> (검색일: 2020. 9. 30).
- Hinich, M. J. 2005. “A New Method for Statistical Multidimensional Unfolding.” *Communications in Statistics-Theory and Methods*. 34. 2299-2310.

Honam Voters' Ideological Orientation and Party Preferenc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21th Legislative Election in
Korea

*Hee, Byong-kyun**

This study examines ideological orientation and partisanship of voters in Honam, a well-known area due to its strong regional voting.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candidate nominations of main political parties and the process and the outcomes of the 21st legislative election and attempts to explain what makes the landslide electoral winning of the Democratic Party (DP) in Honam in comparison with the last one. Analyzing post-election survey datasets collected by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it shows that ideologically left-leaning orientations and party preferences for the DP became strengthened, and that ideological orientations of the public and the perceived ideological distances from the DP and the United Future Party became more important and influential. Honam was not an exception. Finally, it suggests that electoral reforms to improve the proportionality of votes and political efforts to reduce ideological distances from voters for opposition parties by changing party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Chosun University.

platforms are necessary to establish competitive party systems in Honam.

Key words: regionalism, Honam, the 21th legislative election, the Democratic Party, the United Future Party

〈부록 1-1〉 정당별 지역구 당선자 의석수, 의석비(지역별, 정당별 의석 총수 기준, 제21대 총선)

시도명	당선인수	정당별 당선인 수(지역)				정당별 당선인 비율(지역 의석총수기준)				정당별 당선인 비율(정당의석 총수기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무소속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무소속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무소속	전체	
		163	84	1	5	64.4%	33.2%	0.4%	2.0%	100.0%	100.0%	100.0%	100.0%	100.0%	253
합계	253	163	84	1	5	64.4%	33.2%	0.4%	2.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특별시	49	41	8	0	0	83.7%	16.3%	0.0%	0.0%	100.0%	25.2%	9.5%	0.0%	0.0%	19.4%
부산광역시	18	3	15	0	0	16.7%	83.3%	0.0%	0.0%	100.0%	1.8%	17.9%	0.0%	0.0%	7.1%
대구광역시	12	0	11	0	1	0.0%	91.7%	0.0%	8.3%	100.0%	0.0%	13.1%	0.0%	20.0%	4.7%
인천광역시	13	11	1	0	1	84.6%	7.7%	0.0%	7.7%	100.0%	6.7%	1.2%	0.0%	20.0%	5.1%
광주광역시	8	8	0	0	0	100.0%	0.0%	0.0%	0.0%	100.0%	4.9%	0.0%	0.0%	0.0%	3.2%
대전광역시	7	7	0	0	0	100.0%	0.0%	0.0%	0.0%	100.0%	4.3%	0.0%	0.0%	0.0%	2.8%
울산광역시	6	1	5	0	0	16.7%	83.3%	0.0%	0.0%	100.0%	0.6%	6.0%	0.0%	0.0%	2.4%
세종시	2	2	0	0	0	100.0%	0.0%	0.0%	0.0%	100.0%	1.2%	0.0%	0.0%	0.0%	0.8%
경기도	59	51	7	1	0	86.4%	11.9%	1.7%	0.0%	100.0%	31.3%	8.3%	100.0%	0.0%	23.3%
강원도	8	3	4	0	1	37.5%	50.0%	0.0%	12.5%	100.0%	1.8%	4.8%	0.0%	20.0%	3.2%
충청북도	8	5	3	0	0	62.5%	37.5%	0.0%	0.0%	100.0%	3.1%	3.6%	0.0%	0.0%	3.2%
충청남도	11	6	5	0	0	54.5%	45.5%	0.0%	0.0%	100.0%	3.7%	6.0%	0.0%	0.0%	4.3%
전라북도	10	9	0	0	1	90.0%	0.0%	0.0%	10.0%	100.0%	5.5%	0.0%	0.0%	20.0%	4.0%
전라남도	10	10	0	0	0	100.0%	0.0%	0.0%	0.0%	100.0%	6.1%	0.0%	0.0%	0.0%	4.0%
경상북도	13	0	13	0	0	0.0%	100.0%	0.0%	0.0%	100.0%	0.0%	15.5%	0.0%	0.0%	5.1%
경상남도	16	3	12	0	1	18.8%	75.0%	0.0%	6.3%	100.0%	1.8%	14.3%	0.0%	20.0%	6.3%
제주도	3	3	0	0	0	100.0%	0.0%	0.0%	0.0%	100.0%	1.8%	0.0%	0.0%	0.0%	1.2%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부록 1-2〉 정당별 당선자 의석수, 의석비(지역별, 정당별 의석 총수 기준, 제20대 총선)

시도명	당선인수	정당별 당선인 수 (지역)					정당별 당선인 비율(지역 의석총수기준)						정당별 당선인 비율(정당 의석 총수기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전체	새누리당 105	더불어민주당 110	국민의당 25
합계	253	105	110	25	2	11	41.5%	43.5%	9.9%	0.8%	4.3%	100%	100%	100%	100%
서울특별시	49	12	35	2	0	0	24.5%	71.4%	4.1%	0.0%	0.0%	100%	11.4%	31.8%	8.0%
부산광역시	18	12	5	0	0	1	66.7%	27.8%	0.0%	0.0%	5.6%	100%	11.4%	4.5%	0.0%
대구광역시	12	8	1	0	0	3	66.7%	8.3%	0.0%	0.0%	25.0%	100%	7.6%	0.9%	0.0%
인천광역시	13	4	7	0	0	2	30.8%	53.8%	0.0%	0.0%	15.4%	100%	3.8%	6.4%	0.0%
광주광역시	8	0	0	8	0	0	0.0%	0.0%	100%	0.0%	0.0%	100%	0.0%	0.0%	32.0%
대전광역시	7	3	4	0	0	0	42.9%	57.1%	0.0%	0.0%	0.0%	100%	2.9%	3.6%	0.0%
울산광역시	6	3	0	0	0	3	50.0%	0.0%	0.0%	0.0%	50.0%	100%	2.9%	0.0%	0.0%
세종시	1	0	0	0	0	1	0.0%	0.0%	0.0%	0.0%	100%	100%	0.0%	0.0%	0.0%
경기도	60	19	40	0	1	0	31.7%	66.7%	0.0%	1.7%	0.0%	100%	18.1%	36.4%	0.0%
강원도	8	6	1	0	0	1	75.0%	12.5%	0.0%	0.0%	12.5%	100%	5.7%	0.9%	0.0%
충청북도	8	5	3	0	0	0	62.5%	37.5%	0.0%	0.0%	0.0%	100%	4.8%	2.7%	0.0%
충청남도	11	6	5	0	0	0	54.5%	45.5%	0.0%	0.0%	0.0%	100%	5.7%	4.5%	0.0%
전라북도	10	1	2	7	0	0	10.0%	20.0%	70.0%	0.0%	0.0%	100%	1.0%	1.8%	28.0%
전라남도	10	1	1	8	0	0	10.0%	10.0%	80.0%	0.0%	0.0%	100%	1.0%	0.9%	32.0%
경상북도	13	13	0	0	0	0	100%	0.0%	0.0%	0.0%	0.0%	100%	12.4%	0.0%	0.0%
경상남도	16	12	3	0	1	0	75.0%	18.8%	0.0%	6.3%	0.0%	100%	11.4%	2.7%	0.0%
제주도	3	0	3	0	0	0	0.0%	100%	0.0%	0.0%	0.0%	100%	0.0%	2.7%	0.0%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www.kci.go.kr